

국민건강의 첫 걸음,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2018.1.23.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 부각

유럽, 한국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17. 8월)

1.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 안전관리 강화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3.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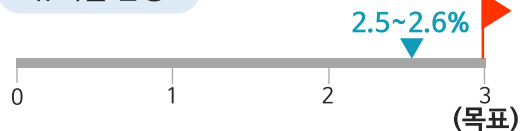
1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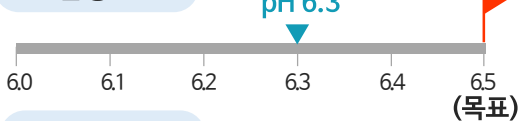
토양

✓ 농경지의 비옥도·중금속 성분 검사

유기물 함량



산성도



중금속

농경지 중금속 기준 초과율 : 1.4%

물

✓ 농업용 호소 수질 측정망 조사 (975개소)

수 질

'17년 환경기준 초과 저수지
8.4% 수준



농약

✓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농산물 부적합률

'17년 기준 1.9%
부적합 사유: 농약(81%), 중금속(15%)



'건강한 땅, 깨끗한 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한 땅 만들기

- ✓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 방지 지원
 - 유기질 비료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추진
- ✓ 폐광산 주변, 산업공단 인근 농경지 등 오염 우려 지역 중금속 잔류조사 강화('18년 3,900필지)
 - 해당 농산물 검사 후 잔류기준 초과시 폐기
- ✓ 전국 농경지 토양조사 DB를 농업환경 안전관리에 활용
 - 기준초과 농경지 개량·복원 등 토양관리 추진

깨끗한 물 지키기

- ✓ 수질기준 4등급 초과 저수지 정화 추진
 - 정화습지, 침강지 설치('18년 누적 : 31개소 252억원)
 - 저수지주변 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전개
- ✓ 중금속 검출 우려 저수지 모니터링
 - 기준 초과시 물 공급 중단, 대체 급수 및 정화 조치
 - * 천안입장저수지('15) : 비소기준 초과로 급수 중단 등 대응
- ✓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 강화
 - 공공관정 수질검사(매3년), 폐관정 점검 강화(연1회 → 2)
 - 공공관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18)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 개선
 - 농업부산물 공동 수거, 생태교란 식물 제거, 농업용수원 청소, 수생식물 식재 등
- ✓ 3~5개 지역 시범 추진, 프로그램 구체화('18)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겠습니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구축

-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현재) 9종 ➡ (개선) 모든 농약
 - 판매시 농약 바코드 정보와
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
 - * 전국 농약 판매점 5,584개소
- ✓ 농약관리법 개정('18년) 및
시행체계 구축 추진



농약판매 관리 강화

- ✓ 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재배작목
확인 후 적합한 농약만 판매
- ✓ 농약 판매인 자격 요건과 교육 강화
 -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경력이나
자격 소지자로 한정
 - 민간에서 운영되던 이수 의무교육을
공공 교육으로 전환(농진청)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준비

- ✓ 소면적작물재배에 필요한농약까지
직권 등록 확대(농진청)
- ✓ 농약살포 실천지침 배포
 - 작목별 등록 농약의
살포량·시기 등 규정
- ✓ 찾아가는 교육(방문·우편 등),
농약상담 콜센터 운영 강화
(농진청·산림청)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

- ✓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 농산물 작업장 위생기준 신설 등
- ✓ 인증기관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3회 연속 미흡) 퇴출 등 조치
- ✓ 상습 위반 농가(인증취소 처분 3회) 영구 퇴출 등 행정처분 부과
 - 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확대



생산기반 확충

-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 논 40~60만원/ha → 50~70
밭 100~120만원/ha → 110~140
- ✓ 유기지속직불 지급 개선(3년→무기한),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친환경농업 지구 확대('18:12개소)
- ✓ 지역별 특화된 저투입 농법 개발을 위해 연구·교육센터 확충('19까지 10개소)



유통·소비 활성화

- ✓ 친환경 자조금('18: 31억원) 활용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 대형마트 판촉행사(3,000여 지점)
- ✓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18: 4개소 → '22: 9)
- ✓ 친환경 물류센터(경기·전남)를 통해 학교 등 공공급식 확대
 - 급식업체 등 매입자금 지원(250억원)
- ✓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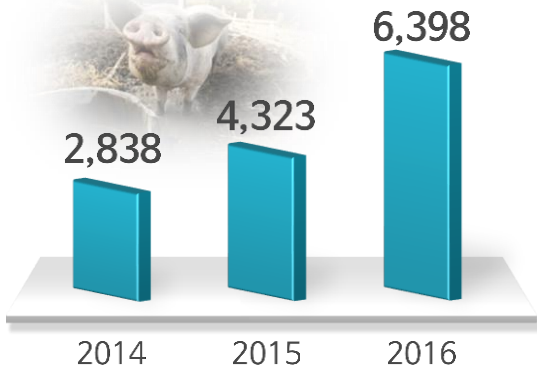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 증가

- ✓ 농장 슬러지, 덜 부숙된 액비가 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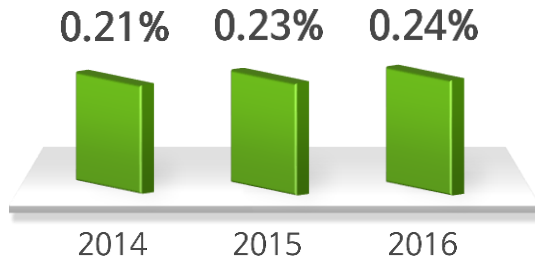
단위: 건



살충제·항생제 관리 미흡

- ✓ '17. 8월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피프로닐 등 검출

- ✓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기준 위반율



질병에 취약한 사육환경

- ✓ A4용지 크기 보다 작은 사육공간
- 산란계 0.05m²/마리

- ✓ AI 발생농가('14~'17) 중
인근농가와 거리 500m 이내
농장 67%



악취 없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장 악취 관리 강화

- ✓ 가축분뇨 처리 매뉴얼 보급
 - 축종·축사형태·시설 유형별 분뇨처리 주기 등 구체적 규율
- ✓ 특별관리 농장 지정, 모니터링
 - ※ 제주 양돈농장 50개소 조사 결과 47개소기준초과→집중관리추진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강화(18년누적 1,750농가)
- ✓ 광역 악취 개선사업 확대
 - 민원 다발 지역 3개소 대상 시설개선, 컨설팅 패키지 지원

분뇨 처리기반 확대

- ✓ 지역 맞춤형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 * '18년까지 110개소, '22년까지 150
- ✓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측정기 설치 의무화
- ✓ 액비 성분 분석기(9개소), 부숙도 판정기(20개소) 보급 확대
- ✓ 축산환경관리원 기능 강화
 -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컨설팅·교육



관리해제 매몰지 소멸 처리

- ✓ '10~'11년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4,751개 모두 발굴·소멸 처리(~'22)
 - '18년 환경 오염도가 높은 940개 우선 소멸 처리(전체 20%, 188억원)
- ✓ 고온 분쇄, 화학적 분해 등 친환경 처리방식 확대
 - * '16~'17년 AI 살처분 방식 중 매몰이 83% 차지
 - 고온분쇄 시설 1개소, 이동식 열처리 장비 20대 지원('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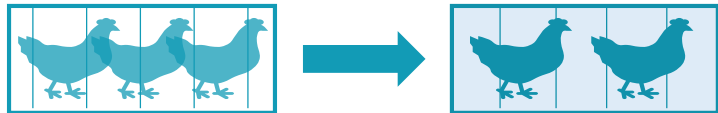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장식 밀식 사육 개선

✓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개선(신규농가, 7월부터)

- (현행) $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개선) 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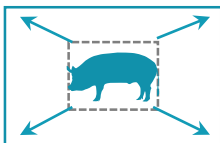


- 기존농가는 '25년까지 조기 전환 유도

✓ 육계· 돼지 임신돈 사육밀도 기준 개선

* 육계: (현행) $33\sim 39\text{kg}/\text{m}^2$ \rightarrow (개선) 33

임신한 돼지: 사육면적을 넓히고,
고정 사육기간 단축 추진



가축 건강 관리 및 학대 금지

✓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 설정

- '19년부터 주요 축종 25ppm으로 설정

✓ 낮·밤을 고려한 축사 조명 기준 설정

- (산란계) 낮 시간 10 lux, (육계) 낮 시간 20 lux,
암기 6시간, (돼지) 낮 시간 40 lux

✓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부리다듬기 고통 최소화

※ 사육밀도 개선 등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정

정책 지원

- ✓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개선 자금 지원 강화(가금류의 경우 보조 30%)
- ✓ 계란 사육 환경 표시제 도입(방사·평사·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구분, 식약처 협조)
- ✓ 동물 복지 인증제 확대 및 인증 후 3년간 직불금 지급 추진

축산업 입지를 재편하겠습니다.

가금 밀집 사육 지역 재배치

- ✓ 농장 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 지원
 - 지역 내 농장 간 합병, 지역 내 이전, 타 지역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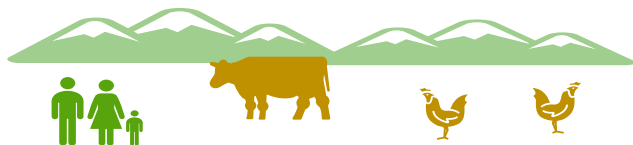


- * 가금 밀집 사육 지역 사례(김제 용지)
 - 56농가, '08년 이후 4회 AI 발생, 1,977억 재정 소요

- ✓ 취락 지역 내 신규 가금 농장 설립 금지
 - 철새 도래지 인근 3km, 가금류 농장 500m 이내 신규 허가 등록 금지

환경 친화형 축산 모델 확산

- ✓ 중·소규모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 초지 조성 비용 등 지원('18년 누적 39개소 지원)
 - 산지 이용규제 완화 검토



- ✓ 지역단위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
 - 새만금 모델, 시·군 단위 모델 마련, 분뇨 및 악취 처리, 질병 예방 최적화 방식 적용
 - 농공단지에 준하는 지원방안 검토



선제적으로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살충성분 농약관리 강화

- ✓ 농가 안전사용기준 신설
- 위반 시 과태료·허가 취소
- ✓ 농장단위 계란·산란노계
전수검사 실시(검사인력·장비 확충)
- ✓ 닭 진드기 방제 현장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확대(연2회)
- ✓ 판매상에게 거래 기록 유지
의무 부여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 ✓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HACCP 의무적용, 축종 확대('20~)
- 축산농장의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살충성분 농약 등 추가
- ✓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축산업
공동방제사업 시범 실시(40개소)
- ✓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
('18년 12.8억원)



항생제 사용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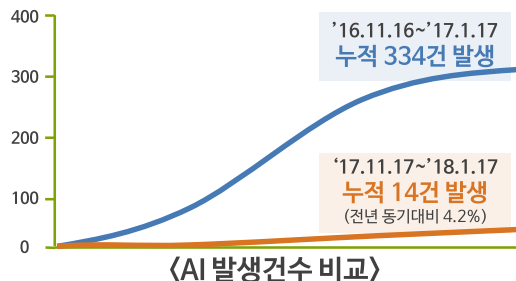
- ✓ 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 ('17) 25종 → ('18) 32 → ('20) 40
-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관리 강화
* 소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 규정
- ✓ 항생제 내성 정기 모니터링, 농가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AI 차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조치

- ✓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 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등 실시
 - 과거보다 1~2일 빠른 대처
- ✓ 계열사 소속농장 발생 즉시, 계열사 전체 이동중지명령, 소독·일제검사
 - 방역소홀 여부 등 정부합동조사
- ✓ AI발생시 해당시·군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7일간 이동·출입 통제



전국단위 차단방역 강화

- ✓ 발생 위험지역 오리 휴지기제 실시
 - * 전체 오리 중 37% (261만수) 사육제한
- ✓ 8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일일 관리
 - * 철새도래지, 밀집지역, 계란 집하장 등
- ✓ 농장 단위 오리 검사(주1회) 및 도축장 출하 검사(30%) 확대
- ✓ 대규모단지 인근 계란 환적장 설치
 - 차량 농가 출입 차단, 주2회만 반출 허용



강원도 특별방역

- ✓ 경기장 반경 3Km 내 가금 수매도태 완료 (197호, 7천여수)
 - 3km 밖 1만수 이상 농가 통제인력 배치
- ✓ AI 발생지역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
- ✓ 중앙 특별 방역단 파견 (검역본부, 30명)
 - 방역조치 이행점검, 기술지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K-Food Plaza 운영

* 홍보관과 식품관으로 구성

- ✓ (홍보관) 전통 상차림, 발효식품 등 한식의 독창성과 가치 홍보
- ✓ (식품관) 곤드레밥, 메밀전 등 강원도 대표 음식 50선과 한식 판매
 - 강원도의 청정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주의' 음식 홍보 기회로 활용



국내산 안전 농축산물 공급

- ✓ 선수촌 한식당에 필요한 농축산물 재료는 국내산 공급
 - 생산자 자조금·농협 등 활용(12억)
(한우 47톤, 돼지고기 23톤)
- ✓ 선수단 식단에 공급되는 농축산물 안전성조사, 원산지정보확인(농관원)



푸드 서밋 개최

- ✓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 초청, 한식의 성장가능성 조명 (2.12~13)
 - 식품·외식분야 글로벌 리더 및 셰프 등 250여명 참석 예정
- ✓ 미래식량 조리시연, 전통주 시음,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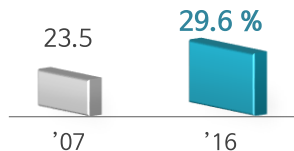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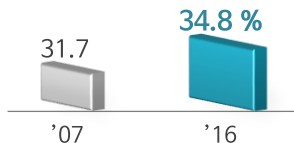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식습관 적신호

아침 결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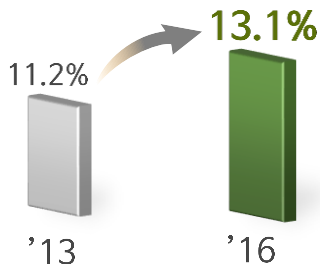
비만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16)

취약 계층 영양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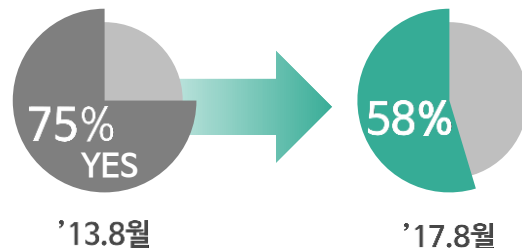
✓ 소득 1/4분위 영양 섭취 부족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16)

식품안전 신뢰도 저하

✓ 국내산 식품 안전한가?



한국갤럽('17)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겠습니다.

어린이

- ✓ 어린이집 '텃밭·미각교육' 지원 ('18년 200개소)
-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명)에게 제철 과일간식 제공(72억원)
- ✓ 영유아·초등학생 농업·농촌 체험 교류 지원 ('17) 30천명 → ('18)35
- ✓ 식생활 교육 종합 정보망 구축



청년 및 어르신

- ✓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아침먹기 ('17) 10개교 → ('18) 20



- ✓ 마을회관, 경로당 어르신 건강밥상 교육 ('18) 900회



취약계층

- ✓ 취약계층 복지용 쌀 할인가공급 및 특등벼 우선공급(연간 8만톤 수준)
-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 가족 자녀 등 57만명
- ✓ 푸드뱅크 연계 농식품 기부
 - 생산자단체, 농식품 기업 등과 협력하여 기부 활성화
- ✓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 추진(2개 지자체)



고지방 위주의 쇠고기 생산을 바꾸겠습니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

✓ (종전) 마블링 (근내지방도) 중심의 등급기준

➡ (변경) 고기 색깔, 지방 색깔, 조직감 등 평가 비중 강화

* 국민 건강에 기여,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
농업 생산-소비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 지역 소비처에
체계적으로 공급

✓ 8개 지자체 선정, 푸드플랜 수립 지원(18, 8억원)

- 매장설치, 물류인프라, 푸드위원회 구성 등

전주푸드 2050 플랜 (도농복합형)

지역 1,031 농가를 조직화하여
관내 120 학교·어린이집에
안전 식재료 공급
HACCP, 콜드체인, 자체검사



부여 굿뜨레 로컬푸드센터 (농촌형, 도심제휴)

지역 내 공공급식 40개소 및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
47개소와 부여군 600여
친환경 농가 연계



소비자·생산자와 안심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소통채널 구축

- ✓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닭, 오리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 ICT 활용, 소·돼지 이력 정보 입력 체계화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안심 모니터링 확대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현장 점검
- ✓ 농축산물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정례화



소비자, 생산자, 정부간

‘소통 협의체’

마련

생산자 소통·교육·홍보 강화

- ✓ 생산자단체와 포럼 구성·운영
 - 분야별, 품목별 정책 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
- ✓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안전 점검 실시
- ✓ 안전·위생 교육·홍보 강화
 - 농약, 항생제 등 사용기준 및 농장단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FIRST 농정

현장(Field)

과 단위, 정책 단위 『현장방문의 날』 운영
성과 공유 토론회 개최(국별·분기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상·하반기)

혁신(Innovation)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FIRST 60 토크』 실시
- 정책 혁신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오지랖 토크
월 1회 전직원 『역량 FIRST 강좌』 실시(사회문화 트렌드, 인문, 교양)
정책 자문단, 정책제안 콘서트 등 국민 눈높이 정책 혁신

책임(Responsibility)

매월 현장농정 성과 평가(의견 수용 노력, 만족도 등)
지역 순회 농정성과 설명회
- 현장중심 정책개선 사례 성과, 추가 과제 발굴

공감(Sympathy)

농정개혁위원회 운영, 청년농 타운홀 미팅(분기별)
국민 생각함, 국민 정책 디자인단 운영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신뢰(Trust)

열린 인사제도 도입
- 주요 격무직위에 '희망보직제도' 운영 → 인사, 승진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청년농업인과의 타운홀 미팅〉



국민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생산과 소비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

농장부터 식탁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식생활·영양

국민 식생활·영양
안전망 구축

환경보전

먹거리 생산과
환경과의 조화

농식품부 · 복지부 · 식약처 · 환경부 · 교육부 및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 단계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